

# 21세기 기술의 미래

## 미국, 방산업계의 자체적 수출통제권 행사를 검토

미국 군수물자 수출통제법의 개혁과 관련한 美 국제·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CSIS)의 보고서 초안에는 군수물자 및 용역의 수출 시 美 국무부로부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現 체제의 완전 백지화가 제안되어 있다.

동 보고서의 초안에 따르면, 중대한 기술 및 군수물자의 수출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은 美 방산업계가 내려야 하며, 수출의 허가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동업계의 자체적인 통제권을 감독하는 쪽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John Hamre 前 국방부 부장관이 이끌고 있는 CSIS는 국방교역의 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저명한 연구기관이다. '21세기의 효과적 수출통제(Effective Export Controls in the 21st Century)' 라는 제목을 가진 22페이지 분량의 동 초안은 2001년 4월 초순 경, 최종적으로 공식문서화될 예정이다.

군사장비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現 통제체제 검토를 이미 완료한 CSIS는 최근 동 체제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CSIS의 노력은 미국의 기술과 안보 상 핵심적인 사항들을 검

토하게 될 '21세기 기술과 안보(Technology &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구상의 일환이다.

동 신규 구상에 대하여, 업계의 자체적인 수출통제권 행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부 비평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물자 및 용역의 수출시 안문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사료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적인 부품이나 구성품 등과 같은 '저위험도'의 물자들과는 다소 다르게 취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수출통제에 대한 동 개념의 또 다른 초점으로서의 사업절차 개혁의 적용이 있으며, 이는 美 연방항공관리국(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등과 같이 해당 관할업계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는 유사 통제기관들에게도 본보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EFENSE NEWS〉 2001. 2. 26  
P3, P52

## 美 방산업계, 정보기술(IT) 시장으로 방향전환

기존 방산 분야들의 성장세 완화 및 이윤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현저한 성장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IT) 용역 부문으로 시장공략의 방향을 전환할 전망이다.



미국의 전체적 국방예산이 증가할 지라도 증가액의 대부분은 작전 및 인사 비용으로 지출되어 연구개발이나 조달을 위한 할당량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인 반면, 국방관련 IT 분야에 대한 투자는 現 Bush 행정부가 연방보안국을 설립할 경우 실질적인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美 방산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상 6% 정도의 이윤율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방산계약들과는 달리, 부쩍 상용시장의 관행이 통례화되고 있는 IT 분야에서는 고정가 방식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분야는 세금 차감 전의 경우 두 자리 숫자의 이윤율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업계로서도 환영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IT 분야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연방정부를 위해 연간 약 400억 달러 어치에 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온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州)정부 및 지역별 정부기관들로 시장진출의 범위를 넓혀 왔다. 방산업체들에게 연방정부 시장의 가장 커다란 고객은 역시 국방부이며, 민수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주요 방산 IT 업체들은

General Dynamics社, Lockheed Martin社, Northrop Grumman社, Raytheon社 및 TRW社 등이며,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공급선 해결책의 강구, 재무계통의 고안 및 관리, 행정(行程)관리 장치, 인터넷 보안, 민·군용 컴퓨터 조직망의 체계통합 등이 있다.

Northrop Grumman社의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회사 총 수입의 약 3분의 1 가량이 IT 분야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EFENSE NEWS) 2001. 2. 26 P34

## 美 정부, 경쟁유치방향 연구단 구성

향후 美 정부의 경쟁유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단이 2001년 4월 소집되어, 오는 2002년 5월까지 경쟁유치 관련정책의 구상 및 법률상의 변경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美 국방부 일반회계과(General Accounting Office : GAO)의 주도로 구성되는 동 연구단은 2001년도 국방법에 의거, 현재 운영예산과(Office of Management & Budget : OMB) 회람 'A-76'의 연방 경쟁유치 규정 아래 시행되고 있는 관련정책 및 절차들을 연구하게 된다.

10~12명 정도로 이루어질 동 연구단의 연구위원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GAO의 David

Walker 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OMB, 민영업체, 노동조합 등 관련분야에서 종사 중인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계약경쟁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관할하는 'A-76'의 규정들은 이행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며, 연방 노동조합의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기관, 계약자 및 조합 모두의 '미움'을 사 왔다. 현재까지 동 규정을 전적으로 이용 중인 개체는 오직 국방부 뿐이다.

조합과 계약자들은 현행 규정이 서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연구단 위원 후보 중의 하나인 한 'A-7' 관련사례 전문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시정이 촉구되는 3개의 부문을 지적하였다.

첫번째는 경쟁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으로, 대개 4년이 소요되는 현재 경쟁의 기간이 극히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정부기관들과 민영업체의 비용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 입찰제안서의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점으로, 동 연구단은 양측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회계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번째는 정부소속 인력들도 민간 계약자들과 같이 'A-76'의 결정에 법정 항소, 또는 GA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DEFENSE NEWS) 2001. 3. 5 P14

### 남미지역, 세계 방산시장의 '보고(寶庫)'

6억 달러 가치의 체계통합 계약을 위한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들간 경쟁의 승리자는 향후 지속적인 남미지역 방산시장 공략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Izar社와 미국 Lockheed Martin社가 연합한 구·미주 업체팀과 Blohm + Voss社 외 2개사로 구성된 독일 업체팀간의 경쟁에서 계약수주에 성공한 팀은 칠레 해군으로 6척의 군함을 비롯한 각종 전투·무기 체계들을 납품하게 될 예정이다.

칠레 공군에서 운용중인 MIRAGE 5 BA/DB

칠레 해군과의 계약과 더불어, 해당 업체팀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역시도 함정 건조 및 체계통합 등의 계약을 추가적으로 수주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관련 지출을 위한 자금부족의 현실이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조달사업을 어느 정도 늦출 가능성은 있지만,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프리깃(frigate)함의 조달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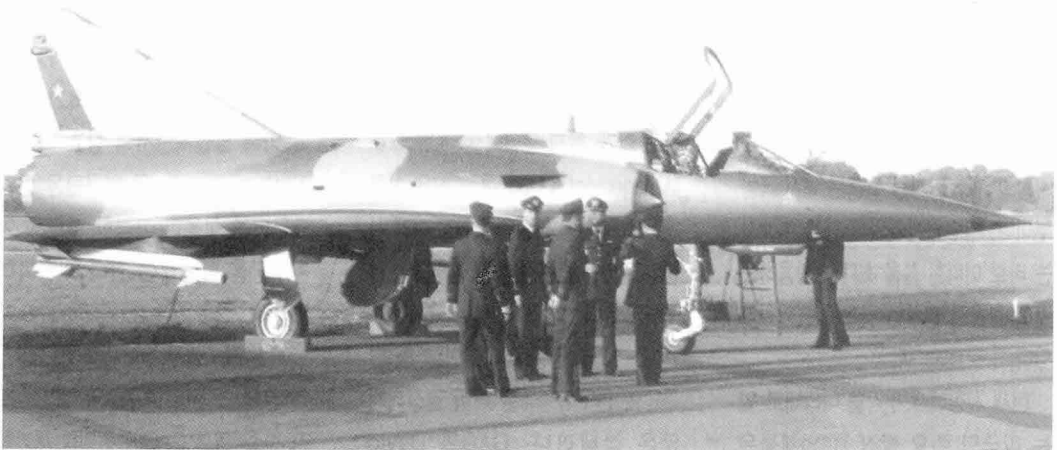
브라질 또한 함정 및 항공기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조달경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정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동 개국의 군사적 결정들에 크게 관여치는 않아 왔으나, 칠레의 함정계약 수주자가 향후 남미지역 방산시장을 점유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임에는 이견을 보이

는 이들이 없다.

향후 양상에는 변수가 있겠으나 유럽은 이미 남미지역의 군함건조 시장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 지역 항공우주 시장의 개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공기 분야의 경우, 최근 칠레는 그들의 오래된 미국의 F-5 및 프랑스의 Mirage를 대체하기 위하여 Lockheed Martin社의 F-16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정을 비롯한, 항공기, 차량 및 기타 군비들에 필요한 감지 및 제반무기 체계의 시장만을 보더라도, 남미지역은 향후 세계 방산시장의 중추적인 공략대상으로 지목될 것임이 명백하다.

(DEFENSE NEWS) 2001. 3. P27





## 美 방산업체 대표단, 민영화의 확대를 추진

영향력 있는 미국의 업체 대표자들은 관료적 절차의 폐지와 함께 부대공급 및 국방통신 등과 관련한 업무들을 민영업체들이 처리토록 하여 연간 약 150~300억 달러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Donald Rumsfeld 美 국방장관에게 제안하였다.

George Bush 대통령은 국방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국방부의 재구조가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umsfeld 장관으로 하여금 군의 구조조정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인 재검토를 실시토록 해 놓은 상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실행' 뿐이라는 차원에서 美 '국가안보 업체 대표단(Business Executives for National Security : BENS)' 은 비용의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다음과 같이 11개 부문으로 압축·제시하였다.

\*수 십여개 군사시설들에 대한 추가적인 폐쇄 : 앞서 97개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폐쇄하여 연간 56억 달러의 절감효과를 보았으나, 동 건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원들의 Clinton 당시 대통령을 기소하였던 지난 1995년부터 중단되었음.

\*군 숙소관련 업무의 민영화 : 특

별히 잘 건축되지도 않은 노화된 군 숙소들의 수리를 위하여, 美 국방부는 아직 지원되지 않은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기지내 에너지 공급업무의 민영화 : 美 국방부는 많은 시설이 노화 및 비효율화된 총 750개 기지에 대하여 전기·가스·수도 등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연간 22억 달러 가량을 지출하고 있음.

\*통신업무의 민영화 : 오늘날 전산처리의 속도를 매 18~24개월마다 2배 꼴로 증가시키는 등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민영업체들은 국방부보다 훨씬 더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국방부는 막대한 양의 일반정보 처리를 위해 민영 통신업체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임.

\*군수업무의 민영화 : 2001년도의 840억 달러를 비롯하여 현재 美 국방부는 총 예산의 4분의 1을 군수관리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공급업체들은 무기체계에 대한 군 관리자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임.

\*2년단위 예산제의 도입 : 전략상의 명백한 변화가 없는 이상 美 국방부는 전략기획의 절차를 연례적으로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며, 갱신 내용이 최소화된 전체적 방향만을 제시함으로써 막대한 인력의 소비를 피할 수 있을 것임.

\*전략적 인력고용 계획의 가속화 : 14개 산하기관 및 7개의 현장활동들

을 통한 美 국방부의 인력고용 지원은 10,000명의 인력과 총 국방예산의 7%를 소비하고 있음. 1997년 국방부는 당시 산하기관 인력의 21%를 향후 5년, 현장 활동 인력의 36%를 향후 2년에 걸쳐 감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강되었음. 각 기관 및 활동개체들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

\*업계형 회계제도의 도입 : 업계와는 달리 극히 복잡한 美 국방부의 관료적 절차들로 인해 국방부 회계원들은 모든 물자 및 용역의 원가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지경이며, 의회의 승인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정부의 회계제도는 각 조직들에 대한 자금은닉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감사만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결정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임.

\*계약절차의 간소화 : 실행 중인 단계이나, 아직은 관례적인 사례들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임.

\*획득개혁의 가속화 : 조종사 프로그램들은 무기체계의 비용 면에서 약 50%까지의 비용절감을 실현하였음.

\*민간인력 고용의 가속화 : 美 국방부와 관련한 총 2,800,000개의 일자리들 중 약 2,300,000개 정도는 본질적인 정부인력 관련직들이지만, 504,000개의 민간직들은 실질적인 외부인력 고용의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DEFENSE NEWS) 2001. 3. 5 P26